

자유주의연구회 포럼 발제문

일시: 2019년 4월 4일 목요일

장소: 자유기업원 회의실

자유론: 시장에 적합한 자유의 개념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참고문헌은 생략했음.

1. 문제의 제기: 자유개념의 다양성
2. 자생적 질서와 시장경제
3. 자유주의와 자유
4. 반시장적 자유의 의미
5.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1. 문제의 제기: 자유개념의 다양성

경제철학에서 자유개념만큼 해명하기 어려운 것은 없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감정적 호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자유는 매력적이다. 자유론의 역사에서 그 매력에 저항했던 정치철학자는 거의 없다. 누구나 자유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개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의 수만큼 자유 개념도 다양하다.

상이한 개념을 최초로 분류한 인물은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콩스탕이다. 프랑스혁명을 기점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에서 민주화의 운동이 격심해질 때 그는 고대의 자유와 현대의 자유를 구분하면서 전자를 정치적 자유(참정권을 의미하는 민주

주의)로, 현대의 자유를 시민적 자유로 개념 규정했다.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구분한 19세기 영국의 토마스 힐 그린은 충동 탐욕을 버리고 애국심, 공동체에 대한 헌신 등, 해야 할 것을 행하는 도덕적 행동을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규정한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이사야 벌린도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구분하면서 전자는 전체주의를 부르는 위험한 자유개념이라고 부르면서 그는 '제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를 선호한다.

일각에서는 공동협력으로 인한 상호의존성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한다. 이런 인식에는 자유는 거칠 것이 없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래서 혼자 살 때 자유가 극대로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주류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는 자유를 극대의 만족을 얻은 상태로 규정한다. 자유를 선택대안의 규모를 의미하는 기회로 규정하기도 한다.

정치적 논의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요구한다거나 자유사회를 부르짖는다고 해도 자유의 개념이 다양하고 서로 모순된다면, 어떤 자유개념을 취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 벌린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의 개념에는 특정한 사회관과 인간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유개념 중에는 시장경제에 적합한 것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자유개념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시장경제에 적합한 또는 부적합한 자유개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경제는 어떤 성격의 질서에 해당되는가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제2장). 이어서 제3장에서는 시장질서에 적합한 자유개념을 정립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논의한 시장경제의 성격과 자유개념에 비추어 반 시장적 자유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2. 자생적 질서와 시장경제

자생적 질서에 대한 오해가 대단히 크다. 아무데나 자생적 질서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질서를 자연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자연적 질서는 인간 행동과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질서다. 인위적 질서는 특수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디자인해서 만든 질서다. 인위적 질서를 조직(Organization)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이분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있다. 인간행동의 결과이지만 인간계획이 아닌 질서가 그것이다. 전형적인 것이 언어다. 언어는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본능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바람직한 질서가 형성된다. 이것이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다. 하이에크가 개발한 자생적 질서 원리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와 같다. 그 원리는 오로지 세 가지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즉, 첫째로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상이한 행동들, 둘째로 이들의 상호작용, 셋째로 상호작용에서 어느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인 결과.

흥미로운 것은 하이에크(그리고 스미스)는 자생적 질서(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행동질서로서 시장질서와 그리고 시장질서의 기초가 되는 규칙질서에 적용하여 어떻게 그 질서가 형성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행동규칙과 이 규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질서의 구분은 게임규칙과 게임규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의 전개과정의 그것과 동일하다.

자생적 행동질서로서 시장경제

예를 들면 국가는 조직이고 사회는 자생적 질서다. 이 둘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조직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달성할 공동목적이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처럼 미리 정한 계획에 의해서 구성원들의 위치가 정해지고, 계획에 따라 할당된 기능을 수행한다(<표>참조).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활동은 사령탑의 지시와 명령을 통해서 조정된다. 사령탑은 구성원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감시한다. 조직은 계층적으로, 즉 지배와 복종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의 예는 소규모의 조직으로서 가족, 이익단체, 기업조직 등과 같은 미시사회(micro-society)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대규모의 조직이다. 이에 속하는 것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각종 간섭주의 경제다.

특징 \ 질서의 종류	자생적 질서	조직질서(인위적 질서)
인식론	진화적 합리주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프랑스 계몽주의
목 표	공동의 목표의 부존 다중심적 질서	공동의 목표의 존재 단일 중심적 질서
사례	시장질서, 국제경제질서 도덕, 화폐, 법, 언어	중앙집권적 경제질서 기업 이익단체, 간섭주의경제
법질서	법(정의의 규칙으로서 민법과 형법(영미식))	입법(공법, 처분적 법, 사회입법)
지배유형	법이 지배하는 사회	목적이 지배하는 사회

이와는 달리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달성할 공동의 목적이 없다.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제각기 추구하는 개별목표들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고전학파의 구조-행동-성과 패러다임인 ‘산업조직론“이라는 학제는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경제에는 적합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자생적 질서를 목적이 지배하는 질서, 즉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학과목이다.

자생적 질서는 거대한(스미스) 열린(포퍼) 사회다. 수백만 수천만의 인구를 포괄한다. 국제경제질서로서 범세계적 분업체계가 바로 자생적 질서이다. 어느 누구도 오늘날 그런 질서를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가 직시해야 할 점은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경제에는 사령탑이 없다는 점이다. 개인들의 관계, 개인과 조직들의 관계 조직들 간의 관계 등, 복잡·다양한 관계들은 수평적이다. 개인들과 조직들은 제각기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습득한 지식을 이용한다. 그들의 활동은 그들 스스로가 상호간의 적응을 통해서 조정한다.

그래서 자생적 질서를 사회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시장경제는 외부의 간섭이 없어도 자생적으로 개인들의 계획과 행동들이 조정된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자생적 질서가 좋은 질서인 이유가 있다. 가격을 통해서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가격은 사회의 각처에 심지어 국제적으로 까지 분산된, 정부는 물론 어느 정신도 전부를 수집가공하여 이용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한 지식을 필요한 모

든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지식은 시간과 상황에 관련된 지식들로서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초 의식적 암묵적 지식이 대부분이다.

소수인의 지식에 의해서 만든 조직과 비교할 때, 자생적 질서가 복잡하고 범세계적으로까지 확대되는 이유가 그런 가격의 역할 때문이다. 내면의 소우주를 중간우주와 거대우주를 연결시키는 것(하이에크), 또는 서수적인 가치평가라는 내면적 영역과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기수적인 가치측정이라는 외면적 영역을 연결시키는 것(미세스)이 가격의 역할이다.

주목할 것은 경쟁의 역할이다. 경쟁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값싸게 충족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것, 미지의 것을 발견하는 절차다. 발전이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이에 돌진하는 것, 그래서 발견의 절차야 말로 경제와 사회발전 원리다. 발견된 지식은 가격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된다.

따라서 자생적 질서의 인간관은 새로운 것, 시장의 틈새기를 찾는 기업가정신을 전제로 한다. 이는 행동규칙과 시장의 진화를 추진하는 힘이라는 것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에서 잘 정립된 개념이다. 발견 자체와 가격의 이용은 공짜다. 공짜점심은 없다는 프리드먼의 신고전파적 시각은 틀렸다. 그 같은 발견과정은 신고전파의 균형이론으로 이해할 수 없다. 시장은 균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시장은 '자원배분기계'가 아니라 지식의 창출과 지식의 사회적 이용 과정이다.

자생적 질서와 행동규칙

주목할 것은 시장과 같은 행동질서가 자생적으로 형성되기 위한 조건이다. 게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게임규칙이 필요한 것처럼 그 조건이 바로 행동규칙이다. 중요한 것은 행동규칙의 성격이다. 어떤 유형의 행동규칙인가?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행동규칙이다. 그 규칙에서는 특정인이나 특정한 그룹을 지정하거나 개인들의 특정한 사정이나 특수한 시점 또는 특정한 장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로 행동규칙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동기가 없다. 그래서 탈(脫)목적적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추상적이다. 셋째로 특정한 행동을 당연 금지하는 내용이다. 금지되는 행동은 예를 들면 도둑질, 폭력, 사기, 기만 등이다. 넷째로 금지될 행동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확실해야 한다. 행

동규칙이 확실성을 가질 때 사람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가이드 할 수 있다.

네 가지 성격의 행동규칙을 도덕철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스미스는 ‘정의의 규칙’(rule of justice), 하이에크는 ‘정의로운 행동규칙’(rule of just conduct)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 행동규칙은 반드시 언어로 표현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또한 반드시 의식적일 필요도 없다. 우리의 행동을 유도하는 행동규칙들은 정의감이나 법 감정과 같이 대부분 초(超)의식적이다. 그러나 그런 행동규칙들은 행동으로 표출된다. 이것이 인간행동의 초 의식적 국면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규칙의 원천이다. 그것은 본능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만든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생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 행동규칙은 언어, 화폐와 같이 장구한 역사적 과정에서 개인들의 독립된 시행과 착오과정,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행동의 선별과정과 확산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같은 문화적 진화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자생적 질서의 원리를 행동규칙의 생성에 적용한다면 첫째로 인간들은 각자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한다. 둘째로 타인들과의 묵계적(convention 혹은 동감적(스미스) 또는 그룹 선별적(하이에크)관계를 통해서 행동규칙이 형성된다. 셋째로 그 때 형성되는 규칙은 그룹성원들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다시 말하면 그런 규칙은 보편성, 탈 목적성, 그리고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는 성격의 정의로운 행동규칙이다.

그런 과정에서 형성된 행동규칙들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 관행 상관습, 종교 규칙, 도덕률 등 사회문화적으로 성장된 행동규칙들, 그리고 소유나 계약관련 법, 불법행위 법 등과 같은 사법, 그리고 형법이다. 이런 법 규칙들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인 합의를 통한 것이 아니라 자생적 질서로서 문화적 진화의 결과다. 그들은 시장시스템의 진화와 함께 장구한 역사적 과정에서 개발된 것이다.

정의로운 행동규칙과 자유의 영역

정의로운 행동규칙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법 규칙이 정의로운 행동규칙의 성격을 갖게 하는 것을 법의 지배 원칙이라고 말한다. 법 규칙이 이 원칙을 충족하면 그 법 규칙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롭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명령이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같은 성격을 가진 법 규칙을 ‘자유를 보호하는 행동규칙’이

라고도 부른다.

어느 한 사람의 자유란 타인들이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특정의 행동을 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에게 소극적으로 특정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달성된다. 그도 역시 타인들에게 마찬가지로 특정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들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와 같이 자유는 주체와 주체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고, 또한 자유는 소극적 의미다. 따라서 자유를 보호하는 법 규칙(자유법)은 허용하는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예외 없이 당연 금지하는가의 문제다.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금지할 행동 또는 제거할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이 문제가 자유의 정책의 핵심 문제다. 자유의 정책은 자유를 억제하는 행동을 국가가 제거하는 일이다.

3. 자유주의와 자유

별런 이후 자유개념을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평화나 행복 또는 안정의 개념이 소극적인 것처럼, 자유의 개념도 소극적이다. 그것은 타인에 의한 장애물이 없는 상태다. 그것은 자유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적극적 개념이 된다.

그런데 흔히 제약 또는 장애물이 없는 상태라는 자유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소극적 개념이라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제약의 성격과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의 성격 때문이다. 제약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제약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모든 사회에는 다양한 제약들이 있다. 분업과 협력 등과 같이 인간관계 자체가 제약이기 때문에 제약이 없는 상태라는 자유개념에 따르면 완전한 자유는 의미가 없다. 그런 자유는 사회적 관계가 없이 혼자 사는 은둔자에게나 의미가 있을 뿐이다. 염두에 둘 것은 시장과 관련된 자유개념은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신체적 제약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날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자유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날을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자유가 의미가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유의 중요한 국면은 변동시킬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약이 없는 상태로서 자유의 개념이 분명한 경우는 예를 들면 타인을 감금하거

나 노예로 만들거나 또는 소비자의 선택과 행동을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행위는 형법을 통해서 금지해야 할 부자유의 대표적 사례다. 주목할 것은 자유로운 행동은 자발적 행동이다. 이는 위협과 같은 강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의 산물이다. 현대의 정신과는 전적으로 다르게, 위협은 홉스에게는 자유의 침해가 아니다. 몽테스키외가 자유의 억압으로 여겼던 공포에 의한 행동도 그에게는 자유로운 행동이다.

개인의 자유와 강제

금지해야 할 제약에서 중요한 것은 하이에크가 제안하는 강제(coercion)다. 그는 강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X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Y의 상황을 조종하고 통제할 경우, Y는 X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Y에게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되고 따라서 이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X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강제는 생각하고 평가하는 인격체로서의 개인을 부정하고 그를 타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만든다.

따라서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강제행사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다. 하이에크는 또한 사기와 기만을 사회구조적으로 볼 때, 강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타인들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사람도 기만당하거나 사기당하는 사람의 여건을 조작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그러나 강제와는 달리 사기와 기만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를 주겠다는 식의 위협 행위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강제개념이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남녀사랑, 친구, 회사 동료, 교회 등과 같은 애정과 친분의 인간관계는 강제가능성이 가장 적다. 주목할 것은 강제가능성이 생겨나기 쉬운 영역이다 까다로운 남편, 잔소리꾼 아내, 신경질적인 시어머니에서 강제가능성이 존재한다. 강제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이 하도급 관계, 회사의 노사 관계 등과 같이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인간관계(‘압을’ 관계로 표현)다. 강제는 정도에서 아주 다양하다. 무력·폭력행사/ 신체적 위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재산을 훼손하겠다는 위협/거래선을 끊겠다는 위협/ 자살한 장애물을 깔아놓아 자발적 행동을 방해하는 행동 등 다양하다.

강제가능성은 인간관계에서 흔한 현상이다. 시장에는 그런 가능성을 억제하는 자생적인 힘이 있다.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직업윤리 예의범절 관습 종교정신 정의감 법 감정 등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사회문화적으로 성장된 행동규칙들이다. 그래

서 강제가능성이 실제로는 강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협력관계로 이어진다. 강제가능성에 정부가 개입하면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든다. 국가를 통한 강제행사만큼 나쁜 것은 없다. 우리의 유일한 근심거리는 국가의 강제라고 하이에크는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강제를 전적으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강제를 막기 위해서는 강제가 필요하다. 언제 강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예컨대 칸트는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강제가 행사되는 한 그 강제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그의 『자유의 헌법』에서 주장하듯이 국가의 정당한 강제는 정의로운 행동규칙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한에서 허용된다.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그런 행동규칙을 지키는 한 자유롭다.

자유 의 윤리적 의미

소극적 자유의 정치적 공준은 개인은 두 가지 공준에서 출발한다. 첫째로 누구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안다. 둘째로 국가는 개인의 목적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윤리적 차원에서 볼 때 자유를 기초로 하는 자유사회는 사람 하나하나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유일한 질서다. 자유 자체의 도덕성은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자유주의는 모든 개인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개인주의를 기초로 한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논리다. 타인을 개인으로서 존중하는 태도, 타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인정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자유주의 정신이다. 간섭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집단주의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정신이다. 누구나 각자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할 줄 모르며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한다.

시장에서는 다수파나 소수파의 욕구에 대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욕구나 그들의 삶의 방법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에서는 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적을 친구로 만든다. 이것이 시장경제를 “카탈락시”라고 부르는 이유다. 거래 상대방이 사회주의자인지 또는 이슬람교도인지, 아니면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의 욕구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타인들에게 강제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심성과 태도야말로 자유주의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정신이다. 자유사회가 그런 정신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자유사회만이 강제를 회피할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기업주가 자의적인 강제 때문에 마음에 드는 들지 않으면 다른 기업으로 이탈할 수 있다. 이상적인 자유사회는 이탈기회가 아주 많다.

관용의 윤리로 간주될 수 있는 개개인들 각자의 가치 잣대에 대한 존중은 인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오류가능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오류가능성주의야말로 서구의 사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요소다.

흔히 자유 또는 재산권을 타고난 권리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는 별로 수긍이 가지 않는 시각이다. 타고난 것은 본능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본능은 근본적으로 자유와 책임을 싫어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주의자 집단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자유와 질서의 관계

자유와 질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질서와 자유는 서로 갈등 관계라고 말하고 있다. 자유를 위해서는 질서를 포기해야 하고 질서를 위해서는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자유경제라고 말할 경우, 이 용어를 흔쾌히 그리고 선뜻 받아들이기를 꺼려한다. 자유경제를 실현하면 질서가 없는 무방비한 상태가 초래되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 자유와 질서 사이에는 갈등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유와 질서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유 대신에 질서를” 요구하는 전체주의와 공리주의 사상이 그런 인식이다. 전체주의 사상에서 자유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서를 잡아야 한다. 무계획적인 생산을 계획된 생산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자유 대신에 ‘질서’를 중요시해야 한다. 자유사상은 잘못된 안내자다. 이와 같은 사상에서 나온 대표적인 예가 토마스 홉스의 국가론, 맑스주의 및 중앙집권적인 경제질서다. 공리주의 사상에서도 자유와 질서는 서로 배반된다. 이해관계가 자생적으로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자생적 질서를 염두에 둘 경우, 개인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들이 내적으로 조정된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야말로 자유와 질서가 서로 양립한다. 자유

와 질서가 서로 갈등하는 경우는 자생적 질서를 조직이 만든 경우다. 자유와 질서가 조화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자생적 질서의 경제관계를 구현하는 시장경제다.

자유와 법의 관계

법과 자유와의 관계에 관한 논쟁에서 상이한 두 가지 정치철학이 존재하고 있다. 그 하나가 바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정치철학이다. 이 정치철학에 의하면 모든 법규칙이나 그 밖의 행동규칙들은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종교적, 도덕적 그리고 전통적인 행동규칙까지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법(행동규칙들)과 자유의 관계가 진정으로 갈등관계인가? 자유와 법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파악할 경우, 자유의 완전한 실현은 사실상 법을 완전히 폐지시켜야 할 것이다.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법학에 적용하고, 법실증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던 벤담은 “법은 자유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과 자유의 갈등관계에 관한 이론에서 법이 없는 상태를 자유의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이러한 대립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익 또는 효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벤담은 어느 한 법이 개인들 및 사회에 순효용을 가져다 줄 경우에만이 그 법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법의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유의 손실이 그 법이 가져다주는 효용의 증가에 의해 상쇄될 경우에만이 그 법은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이때 효용은 사회 정책적 또는 경제정책적인 구체적 목적들을 의미한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에서는 법은 자유에 있어 필요하고도 본질적인 조건으로 간주하는 전통이다. 이 전통의 계승자가 바로 한편으로는 하이에크 및 오스트리안 학파와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창시자들, 즉 오이켄, 뵘이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는 로크의 유명한 말이 생겨난 것이다. 자유는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정의와 법의 함수다. 법은 일반적, 추상적 행동규칙, 즉 정의로운 행동규칙의 성격을 가진 법이다. 자유는 법 아래에서의 자유다. 이러한 성격의 법은 사법이다.

법은 점진적 진화의 결과

소극적 자유 개념이 쓸모없는 개념이라는 비판이 있다. 금지될 행동이 미 결정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치이론은 일련의 원칙들을 주장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따져보고 검토하는 일은 지속

되어야 할 작업이다. 정치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대상이다. 끊임없이 원칙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을 방어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원칙들의 내용은 미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사회이론도 일반적으로 미결정적이다. 그 미결정의 근본적 요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을 선형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을 찾을 수 있고, 그런 원칙만이 용납될 수 있는 원칙이라고 믿는 것은 일종의 계획사상의 합리주의의 소산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여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확립하느냐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고 그래야 완전한 정치적 이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선형적으로 빈틈없는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방식의 주장이다. 지적 자만에서 비롯된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유토피아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금지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정치적 사법적 그리고 학문적 논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이런 해결에서 자유주의자라면 언제나 자유의 소중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자유의 존중을 염두에 둔 법의 개발은 열린사회의 진화를 보장하는 법체계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오로지 이런 자유의 존중아래에서만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국가간섭과 그리고 소극적 자유는 무용지물이라는 주장 사이에서 법체계의 꾸준한 개발이 가능하다.

4. 반시장적 자유의 의미

흔히 자유를 행동제약(constraint, 장애물)이 없는 상태로 규정한다. 어느 한 사람의 행동과 선택은 타인의 행동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한 그는 자유롭다. 자유의 정책은 모든 제약을 제거하여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방해가 의도적이라는 점이다. 이승훈 교수가 지적하듯이 자유개념을 규정할 때 의도적인 행동만을 고려한다. 이것이 하이에크와 같이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다.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도 부자유의 예가 의도적인 침해와 같은 종류다.

그러나 무의도적으로 타인들이 어느 한 사람의 재산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대

단히 많다. 자동차 사고, 의약품 장난감 같은 제조물 등 불법행위(tort)가 그런 유형이다. 이런 문제를 자유론에서 다루지 말아야 할 필요성은 없다.

왜 자유주의자들이 의도적 행동만을 자유의 침해로 여길까? 정치이론가들이 무의도적인 행동에 관한 문제를 자유론에서 경시하는 이유는 그들의 주요 관심이 국가권력에 의한 자유의 억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권력의 행사에서 의도와 목적이 지배하고 있고 이로써 자유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자유와 도덕적 목표

제약이 없는 상태로서 자유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행동과 옳은 혹은 유덕한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다. 옳은 일을 행하거나 가치 있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한 자유라는 인식과는 달리 시장과 양립하는 자유개념은 행동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오로지 금지되어질 것에만 관련되어 있다. 가치 없는 행동에 자신의 자유를 허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자유를 이용하는 사람만큼 자유롭다. 자유는 나쁜 일을 행하고 또 실수를 저지를 자유까지도 포함된다. 이런 광범위한 자유가 허용되는 이유는 인간은 잘못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사회발전은 이런 학습에 좌우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국가가 개인들에게 도덕적 목표를 추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의의 규칙에도 어긋난다. 그런 강제는 문명의 퇴보이며 그래서 치명적 자만이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미덕을 행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악덕을 행하라고 강제하는 것만큼이나 불합리한 것이다. 도덕적 악을 없애려고 강제당한 사람들에게 보다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도록 강제당한 인간에게 보다 더 큰 피해와 불행을 초래했다.

자유와 욕구충족

이사야 벌린은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장애물이 없는 상태를 자유와 동일시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자유롭다. 욕구충족과 만족을 자유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느 한 사람이 자기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선택대안을 행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강제한다고 해도 그는 자유롭다. 이런 자유개념은 신고전파의 자유개념과 흡사하다.

이런 자유 개념의 바탕에는 최영백 교수가 보여주고 있듯이 주어진 행동대안 가운데서 극대의 만족을 주는 것을 선택하는 로빈스적 인간의 관점 깔려 있다. 이

자유개념은 균형이론의 관점이다. 어느 한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누군가가 하지 못하도록 막고 극대의 만족을 주는 대안만 있으면 자유롭다고 하다면 이런 자유는 지금 하고 싶지 않은 대안에서 장차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기회가 차단된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것을 발견할 자유, 기업가정신의 커즈너적 인간이 활동할 자유가 없는 상황이다.

신고전파의 로빈스적 인간관의 예는 존 로크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형무소 감방에 어느 한 사람이 구속되어 있다. 감옥 문은 나갈 수 없게 잠겨있다. 그는 아주 편히 잠잔다. 너무도 편안하고 안온하게 느낀다. 그는 자유롭다. 그런데 감옥의 문을 잠겨있지 않다. 이제는 그는 형무소를 떠나거나 아니면 머물러있거나를 선택할 수 있다. 비로소 그는 자유롭다. 그는 장차 감옥보다 더 훌륭한 대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의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존재하는 자유를 개인들이 실제로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못하게 금지된 사람은 현재 아무리 만족하더라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금지로 인해서 장래의 진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자유사회는 개인들에게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허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강제적인 국가권력을 최소로 줄여서 개인들이 선택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사회다. 자유주의의 역사는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를 항상 귀하고 좋다고 여기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찾고 선택할 필요성은 귀찮고 부담이 되고 불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더구나 그런 발견과 선택은 성공의 보장도 없다.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두렵고 불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홀로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형무소의 삶이 그리워서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다. 다른 말로 하면 국가권력에 의존한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복지국가다.

자유와 복지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자유하다. 어느 한 개인이 물질적인 수단, 즉 후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그는 자유롭다. 소득의 격차 및 후생의 격차는 자유의 불평등과 동일하다. 이로써 자유와 후생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유와 후생은 대부분의 인간들이 갖고 싶어 하는 두 가지 가치이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가난하면서도 자유로운 인간들이 있을 수 있고, 부유하면서도 부자유한 인간들이 있다. 가난한 농부와 부유한 집의 노예가 그 전형적인 실례이다. 독재자의 측근 관료 또는 절대주의적 지배자의 최고 사령관과 거리의 장사꾼 역시 또 다른 예다. 따라서 자유와 후생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유와 복지를 동일하게 보는 시각은 자유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재산의 균등 분배를 요구한다. 소득 격차나 후생 격차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의 확립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소득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은 자유 이념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이와 갈등 관계에 있게 된다. 자유와 후생의 동일성을 기초로 한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자유로운 질서를 조직으로 전환시킨다.

적극적 자유와 자유주의

자유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의 신성함이다. 계약을 자유로이 체결한 사람은 계약조건이 까다롭다고 해도, 자신의 관심을 잘 아는 그래서 자유를 인정받는 당사자의 선택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법은 노예계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약을 집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가 그 개인에게 무엇이 좋은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자유는 그가 홀로 남는 영역의 함수다. 개인의 자유는 행동의 품질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적극적 자유는 그렇지 않다. 자유를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행동의 품질을 따진다. ‘불합리한’ 욕구나 목적, 탐욕적 삶, 정념의 노예 등에 따른 행동은 자유롭지 않다, 도박, 알코올중독자는 부자유하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행하도록 지시하는 법은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해방시킨다고 말한다.

적극적 자유에서 흥미로운 것은 루소다. 진정한 자유는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동만이 자유롭다고 한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증진하는 법을 우리가 만들도록 민주제도를 설계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무엇인가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는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법을 도출할 수 없다. 그때의 법은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는

조직사회를 위한 법이다.

소극적 자유를 부인하고 적극적 자유를 대변했던 인물은 토마스 힐 그린이다. 계약의 자유를 위반하는 국가간섭은 실제로는 적극적 자유를 증진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자유를 가치 있는 목적으로서 공동체적 목적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적절한 자유는 시장에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왜냐하면 교환관계는 단순히 주관적 선택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린의 그 같은 생각은 복지국가철학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복지를 증진하는 국가간섭은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가 시장을 반대하는 것은 불평등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가 상업적 본능에 의해서 오염될수록 우리의 공공적 본능이 억제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사야 벌린은 적극적 자유에 연루된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 자유는 자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 사회주의는 시민들에게 고도의 도덕성을 지닌 자아를 요구한다. 개인의 높은 차원의 목표를 계급이나 민족과 같은 집단의 목표와 동일시하면 그 길은 전체주의다. 벌린이 20세기의 전체주의를 보고 그 원인을 적극적 자유에서 찾았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고 벌린이 시장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 무제한의 경제적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동안 빈곤과 질병 무지로 고통을 당해야 했다고 말한다. 법적 권리에 대한 약자와 빈곤자의 향유란 웃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은 틀렸다. 시장과 산업화가 하루아침에 진수성찬을 차려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체제보다도 실업과 빈곤을 완화했던 것이다.

흔히 소극적 자유를 굶어죽을 자유라고 비아냥거린다. 이는 틀렸다. 두 가지 자유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 자연과 전쟁 문제이지 자유와 관련이 없다. 자연을 점령하지 않는다면 굶어 죽기에 자유롭다. 소극적 자유는 국가의 재분배가 자유를 증진한다는 이유로 그런 국가간섭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밀은 국가권력에 의한 자유의 제한을 논의하는데 관심이 크지 않았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는 무소불위의 절대적 왕권에 의한 자유의 제한은 철폐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 상황은 그의 자유론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계획과 간섭의 문

제를 다루지 않았던 이유다. 당시에는 국가의 간섭에 의한 자유의 제한보다 도덕적 사회의 여론, 인습과 윤리 등으로 자유가 억제되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발견했다. 엄격한 도덕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했다.

밀은 사회문화적으로 성장된 사회적 규범과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중이 관습의 노예라고 불평한다. 그런 가치에 복종하는 것을 강제라고 믿었다. 그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경멸했다. 이런 경멸은 그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임을 입증한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밀의 이런 시각을 강력히 반대했다. 관행, 규범 등과 같은 비공식 규칙들은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도 개인들의 사회적 삶을 촉진시키는데 법률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행동규칙들의 존재로 인하여 사람들은 타인들의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최소한의 행위의 일관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들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노력을 방해하기보다는 지원해 준다.

밀에게 자유는 제한이 없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태도의 의도적 개발이다. 이 때문에 그에게 자유는 적극적 개념이다. 자유를 누리려면 높은 차원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해약원칙이다. 그는 타인들에게 해약을 주지 않는 한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다. 언제 타인들에게 우리는 해약을 미치는가? 어느 한 행동이 정부의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신기술도입으로 인하여 노동력 수요가 감소할 경우, 그런 행동은 자유로운 행동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더욱 더 흥미로운 것은 타인을 돕기 위해서 했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다. “행동하지 않는 것”(무작위, non action)도 해약을 야기한다고 한다. 밀의 견해는 작위와 부작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보통법 전통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러나 밀의 견해가 등장한 이후 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수용되었고 최근에는 공정성 또는 사회정의에 기초를 둔 모든 법에 적용되고 있다. 무작위를 작위와 동일시한다면 개인의 자유가 대폭 억제된다.

소수자 노인 부녀자의 고용을 차별할 경우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물으면, “그것은 불공정하다”고 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차별당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어떤 피해인가라고 물으면 “당연히 가질 기회를 박탈했다”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고용자는 그 개인을 구타한 것도 아니고 기만한 것도 아니다, 단순히 그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은 것뿐이다.

어쨌든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원칙은 첫째로 국가와 법은 개인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여기는 것을 증진하기 위해서 개인의 삶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념의 온정주의를 배제한다. 둘째로 어떤 행동들은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는 관련이 없이 내재적으로 부도덕하고 그래서 그런 행동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도덕주의도 배제한다. 셋째로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사회적 편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국가의 간섭을 허용하는 벤담 또는 후생경제학과도 다르다.

코즈 정리와 재산권 문제

작위와 부작위를 동일하게 보고 불법행위(tort)를 취급하는 로널드 코스 이후 정립된 개념이 “외부효과의 상호성”이다. 이것도 보통법 전통과 정면으로 충돌할 뿐만 아니라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한다. 외부효과의 상호성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코스 정리부터 설명하자: 예를 들면 어느 한 공장의 연기 때문에 세탁소의 세탁물이 더럽게 되었다. 세탁소를 위해 공장의 매연을 막으면 공장이 피해를, 공장 매연에 대한 책임을 세탁소가 짊어지면 세탁소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 피해의 상호성이다.

국가가 할 일은 그 피해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거래비용이 제로인 경우에는 책임을 누구에게 할당하든 관계가 없이 자원배분의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이 코스의 정리다. 제로인 경우 국가는 어느 쪽이든(제비뽑거나 또는 어떤 다른 식으로) 책임을 할당하기 하면, 더 이상 개입할 필요 없이 개인들의 상호작용(협상)을 통해서 피해의 문제가 해결된다.

거래비용이 큰 경우에는 국가가 어느 쪽에 책임(권리)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 비용 또는 편익을 계산하여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또는 사회적 편익의 극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책임(권리)을 할당해야 한다.

코스 정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부작위 개념이라는 점이다. 이 개념이 없이는 피해의 상호성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A의 공장에서 방출하는 연기 때문에 B의 세탁소가 바깥에 널어둔 세탁물이 더럽게 되었다. 그런데 A가 매연방출을 중단하거나 혹은 B가 옷을 말리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면 문제는 끝난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거부한다. 그래서 생겨난 게 피해다

따라서 피해의 상호성을 전제하려면 기회가 있을 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부작위도 작위(action)만큼 목적의식적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부작위는 법률과는 관계가 없다. 법의 역할에서는 누가 타인의 인격이나 재산 또는 건강과 자유를 침해했는가가 중요하다. 그 침해자를 찾아내어 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법의 역할이다. 부작위를 침해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같은 입법이나 재판은 개인의 인격, 재산 생명 존중의 도덕감을 무력화시킨다. 정부에 의한 권리의 믿을 만한 보호와 집행이 없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사회적 목표나 사회적 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코즈 정리”는 도덕적으로 가장 음험한 년 센스 중 하나이다

상호성론은 우리의 상식적 원리 및 법 감정과도 일치되지 않는다. 우리는 서슴없이 매연 공장이 세탁소의 재산에 해를 끼쳤다고 말한다. 어느 철도회사 열차의 불티로 농부의 소유물을 해쳤다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층간소음도 위층의 소음으로 아래층에 피해를 준다. 국가가 유괴를 억제·제한하면 유괴범에 피해를 준다. 유괴범을 내버려두면 희생자에게 피해를 준다. 이것이 피해의 상호성이라고 한다면 재판관은 각 당사자들이 타인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가해도 좋은가를 밝혀내는 노력에서 경제학은 탈가치판단의 경제학이 아니라 사악한 경제학이다.

법의 변동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인간들의 정의감 또는 법 감정이다. 법감정 또는 정의감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는 것은 법 실증주의 오류를 범한다.

법이 사회에서 수락되려면 그것이 자연적 정의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하이에크가 지적하고 있듯이 정의감 법 감정은 인간들이 특정의 행동규칙이 정의롭지 않다는 판단을 인도한다. 그러나 그런 감정은 어감과 마찬가지로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초 의식적 행동규칙이다.

흥미롭게도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가해자에게 권리를 주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당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칙이 진화적 과정에서 생성될 것 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다시 말하면 환경 오염자를 동시에 환경자원의 소유자로 만드는 행동규칙은 인위적인 간섭에 의하지 않고는 진화적 과정 속에서는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법적 관계에서 인간은 수단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적 그 자체 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개인의 자유의 본질이다. 이것이 정의의 잣대로 볼 때 효율성의 치명적 한계이다.

Liberty vs. Liberties

자유 의 논의에서 빼놓을 없는 것은 단수(單數)로 표현하는 자유(liberty)와 복수(複數)의 자유들(liberties)의 의미다. 본래 자유의 용도는 많지만 자유는 하나다. 복수로 사용할 경우 자유는 분할 가능하고 존 롤스처럼 자유는 분배의 대상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자유가 없을 때 ‘자유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자유들을 나누어 준다. ‘자유들’은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인들이 받는 특혜나 면제이고 나머지는 부자유하다. 누구는 자동차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다른 기업은 금지하는 상황을 기술할 때 자유들을 말한다.

특정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허용 또는 허가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다. 자유를 허용·허가한다고 말할 수 없다. 자유는 특정한 행동을 할 자격이 아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의 경로는 특정한 자유들을 얻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렇다고 해도 특정한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하나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뿐, 강제가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는 아니다 ‘자유들’이라는 개념과 ‘자유’라는 개념의 차이는 모든 것이 금지된 상황과 일반적인 정의로운 행동규칙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이 허용된 상황과의 차이와 동일하다. 그 차이를 규제방식에 비유한다면 허용하는 것만을 정하는 포지티브 방식과 금지할 것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차이와 같다.

5.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도 흥미롭다. 정치적 자유는 선거권, 참정권 등을 표현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주권재민과 같은 의미다. 흔히 민주가 자유이고 자유가 민주라고 주장하는 헌법이론가도 있다. 더 혼란스런 것은 자유민주의 개념이다. 보수적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자유를 위한 민주가 자유민주라고 말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후쿠야마는 1989년 사회주의 붕괴를 자유민주의 승리라고 말하면서 이런 역사적 사건을 역사의 종언이라고 말했다. 존 롤스는 정치적 자유를 언론 출판 등 시민적 자유와 나란히 그의 첫 번째 정의의 원칙에 의해 동일하게 보호받고 있다.

자유와 민주의 차이

민주와 자유는 분명히 다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부선택이나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누가 지배하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일인지배, 과두지배 민주적 지배 가운데 이상적인 지배방식이 민주지배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원천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이상적인 원천이 시민들에 대한 권력의 분배를 뜻하는 주권재민이다.

자유주의는 누가 지배하든 지배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문제를 다룬다.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사적 영역의 확립에 초점을 맞춘다. 가장 이상적인 국가형태가 법치국가다.

그 차이를 분명히 했던 인물이 프랑스 정치철학자 벤자맹 콩스탕이다. 그는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는 고대(로마시대)의 자유와 언론·종교의 자유 등 사적영역의 자유를 엄격히 구분했다. 수십만에 불과했던 민주주의는 인구가 적었던 고대에서나 적용할 수 있을 뿐 2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오늘의 프랑스에는 적합하지 않고 현대에는 개인의 자유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고대인들의 목표는 시민들에게 권력을 배분하는 것이었다. 현대인의 목표는 시민들 각자의 사적 소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콩스탕은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와 민주의 갈등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전적으로 다르고 또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사적 영역이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지배하게 되면 이는 자유의 증가가 아니라 그 감소를 초래한다는 건 공공선택론에 의해서 입증하고 있다. 단기적이고 차별적 입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은 정부가 사적 영역을 침해하여 개인의 자유를 훼손한다. 복지국가의 등장도 그런 정치적 자유의 결과이다. 민주주의는 거대국가 등장을 야기한다. 이는 레바이어던의 문제(Leviathan-problem)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시민들의 권리 중에 정치적 권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를 자유사회라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틀렸다. 정치적으로 다룰 문제들의 범위가 일반준칙에 의해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 사적으로 파고들어 가기 때문이다.

사적 세계야말로 문명된 사회의 핵심 요소라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치, 사법과 공법의 구분 시장경제 등 자유사회의 제도적 틀 내에서 제한적으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적용하는 제한적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시민과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정치가 사이에 존재하는 대리인 문제도 심각하다. 의회가 급료를 스스로 정한다. 정치권의 의제선택이 독점적이다. 정치가와 시민들 사이에 비대칭적 정보와 도덕적 해이 문제 등으로 시민들은 정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적 공급의 공공재화적 성격 때문에 유권자에 의한 정치통제에는 절대적 한계가 있다. 통제에 필요한 지식의 수집과 가공 및 그 이용에서 질적 양적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16년 민경국 저 『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에 수록된 것임(59~81쪽)

정치철학으로서 경제적 자유주의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좌파는 경제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구분하고 경제자유를 무시하는 반면에 시민적 자유를 중시한다. 그 대표적인 정치철학자가 존 롤스(J. Rawls)이다(민경국, 2007: 184, 448). 그의 기본적 자유(basic liberties)의 목록에는 경제자유와 그리고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빠져 있다.

롤스의 철학은 독특하게도 재산권이론이 없다(민경국, 2007: 434 이하). 그 대신에 언론의 자유, 출판,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시민적 자유와 그리고 참정권을 의미하는 ‘정치적 자유’만 들어있을 뿐이다.

경제적 자유는 롤스의 정의의 제일 원칙으로서 자유의 원칙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이 그는 경제적 자유를 배제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자유주의를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경제적 자유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입장은 영국의 노동당과 미국의 좌파의 전통이다. 그 같은 전통에서는 경제적 자유는 아무리 제약해도 된다는 생각이 배어있다.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치사상에서 배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경제적 자유는 경시해도 된다는 생각은 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또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 보나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자유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주의는 경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민적 자유와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는 정치철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제적 자유에 대한 오해를 설명할 것이다. 이어서 경제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입증할 것이다. 이로써 경제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는 정치철학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사람들은 오늘날 자유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 또는 시장자유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자유주의 자체를 폄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더구나 하이에크 프리드만 등은 경제적 자유만을 중시했고 다른 자유를 등한시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의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자라고 암묵적으로 그 권위를 격하시키려한다. 자유주의가 오로지 경제적 자유만을 의미하는가?

경제적 자유와 행동의 자유

경제적 자유는 행동의 자유라는 넓은 의미의 자유 개념의 한 부분이다. 경제적 자유란 ‘자생적 질서’의 개념을 경제 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행동의 자유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임(행동할) 자유를 말한다.

환경변화에 적응하려는 자유, 또는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환경변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형성하고자 하는 자유이다. 이런 행동의 자유에서 행동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행동도 전부 포함한다.¹⁾

행동의 자유를 적용할 수 있는 부문의 대표적인 예는 “비영리조직” 또는 비상업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이다. 이런 조직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예를 들면 일자리 찾아주기, 가난의 해소, 의료시설 운영, 환자 돌보기, 청소년 범죄 예방, 빈민의 삶의 개선, 장학사업, 마약퇴치, 연구지원 등과 같은 것들이다.(Hayek, 1981: 76~79쪽).²⁾

그 밖에도 비영리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이런 독립부문의 활동은 이익단체의 역할과는 차이가 있다. 이익단체는 기본적으로 자기 몫을 차지하기 위한 이른바 분배목적의 둔 상업적 연립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그런 비영리적 활동, 이타적인 활동까지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단순히 시장자유주의 또는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경제적 자유라고 해서 오

1)행동의 자유는 사소한 일을 행하는 일까지도 포함한다. 교역과 생산은 물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집안을 정리하는 것, 이런 행동의 자유도 사소한 것 같지만 문명의 과정에 대단히 큰 기여를 한다. (Hayek, 1971: 45쪽)

2)이런 제3섹터를 강조하여 공동체주의를 구성한 학자의 대표자는 에치오니(A. Etzioni)이다. 그는 1993년 저서 『공동체주의의 정신』에서 소규모 공동체의 사회적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로지 경제적인 것만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도 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을 최종목적으로 할 경우에만이 순수한 경제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전노 같은 사람의 활동의 자유가 그렇다. 그러나 최종목표로서 경제적 목적이란 없다. 경제적 목적 또는 경제활동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경제적 자유라고 해서 그것이 시장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자유이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행동의 자유’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이 행동자유는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자유이다. 집에서 집을 정리하는 자유, 목사가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유도 경제적 자유이다. 이타적 행동이든 이기적 행동이든 모든 행동 속에는 경제원칙에 따라 행동이 내재되어 있다. 적은 돈으로 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경제적이다. 들어온 돈을 자선단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경제적이다.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헌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경제적이다. 그 어느 활동도 경제적이지 않은 행동이 없다.

경제적 자유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유

경제적 자유라고 말할 경우 오로지 생산자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이해를 기초로 사람들은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즉, 자유주의는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자유는 생산수단을 가진 생산자 또는 기업인과 같이 소수파의 자유일 뿐이지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자유란 의미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가진 자의 이념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경제적 자유란 가진 자만을 위한 자유라는 것이다. 정말로 경제적 자유가 가진 자에게만 유리한 자유인가? 경제적 자유가 가진 자만의 자유라는 주장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누구나 경제적 자유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고 생산수단의 소유자만이 그런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도 그 행사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도 편익을 얻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기업의 생산 활동의 자유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의 향상 그리고 상품공급의 증가를 야기하고 이런 편익은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중요한 편익이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는 약자를 위한 체제이고 빈곤을 퇴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체제이다.

경제적 자유가 오로지 가진 자만의 자유라는 주장이 잘못이라는 것은 다른 자

유와 비교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좌파들이 중시하는 출판의 자유도 소수가 행사하지만 그런 행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익을 가져다준다.

학문의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소수가 학문의 자유를 향유한다. 그러나 그런 학문의 자유권 행사의 결과로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견, 의료기술의 발견은 모든 사람들이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경제적 자유를 순전히 생산자와 기업인의 자유라고 해도 그런 자유의 행사는 소수만이 행사할 수 있는 출판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와 똑같이 보편적인 편익을 야기한다. 따라서 내가 그 자유를 이용할 경우에만이 그 자유의 편익을 얻는 사람은 나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하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를 순전히 기업인의 자유 또는 생산자의 자유로만 국한할 수 없다. 소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도 경제적 자유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더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생산자 자유는 소비자를 위한 자유라는 것이다. 경제의 궁극적 목적,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와 시장자유주의

따라서 자유주의는 단순히 시장자유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결코 경제적 자유주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이외에도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출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 수많은 자유를 등한시하지 않는다. 등한시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이렇다. 즉 정신적 자유로서 의견의 자유의 예를 들면, 의견의 자유는 인간들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촉진시킴으로써 더 많은 지식이 발생되고 축적되어 사회적인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자유주의가 생겨난 것도 그런 확신 때문이다. 정신적 자유에 의해 확립된 지식의 확대와 지식의 향상, 지식의 축적 그리고 이로써 개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의 증대, 이 모든 것이 자유주의자들이 제일로 기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하이에크는 자신의 저서 『노예의 길』 제11장 “진리의 종언” 맨 뒤 부분에서 정신적 자유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³⁾

3) Hayek(1981) 208쪽 하이에크는 이 인용문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지식의 성장과정의 본질은 과정의 결과를 아무도 예측 할 수 없다는 것, 어떤 견해가 이런 지식의 성장과정을 촉진할 수 있고 어떤 다른 견해가 그렇게 할 수 없는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 성장과정을 억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견해도 그 성장과정을 지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서로 다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상호작용은 정신적 삶의 본질을 구성한다. 우리의 지식의 성장은 그런 다양성에 기초를 둔 사회적 과정이다. 우리의 이성적 지식(Vernunftwissen)의 성장은 다양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 과정이다.”

하이에크는 지식의 사회적 성장 과정을 통해서 개인들의 이성이 성장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정신적 자유는 개인들이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학습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터전이다. 이것이 없이는 인간이성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인간 정신이 사회적 과정으로서 지식의 성장과정을 계획하거나 조직할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인간의 그런 시도는 불가능하고 그 자체 모순이다.

인간 정신이 자신의 성장을 비로소 가능하게 해준 사회적 과정을 감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신적 자유를 억압하여 지식의 성장과정으로서 사회적 과정을 억압하려고 한다면 이런 시도는 오로지 지식의 성장을 가로막고 조만간 정신적인 정지 상태를, 결국에는 정신의 황폐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자유주의가 물질적인 증대만을 강조한다는 주장, 물질적 증대를 위해 경제적 자유만을 강조한다는 주장, 이런 주장은 전부 옳은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히틀러시대와 무솔리니, 스탈린 시대를 경험했고 그리고 특히 옛 소련이나 동유럽의 사회주의에서 언론, 출판, 의견의 자유와 사교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유의 억압을 체험했다. 이런 체험을 한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정신적 자유(시민적 자유라고도 부른다)를 무시한단 말인가?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이유

그럼에도 자유주의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많은 반(反)자유주의 지식인이나 정치가들, 특히 좌파들은 경제적 자유를 박해하고 그 대신에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즉, 정신적) 자유와 그리고 참정권을 의미하는 정치적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좌파진영을 대표하는 인물은 미국의 유명한 정치철학자 존 롤즈이다. 그는 사유재산권이나 경제적 자유를 무시해버렸다. 그 대신에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같은 자유⁴⁾ 등을 중요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롤즈의 1992년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그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정치적 자유주의자’이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사회민주주의이나 다름이 없다.

자유주의자들은 20세기 내내 국가권력이 경제 부문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그 어떤 부문보다도 가장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을 목격했다. 좌파는 정치적 자유나 학문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격렬히 막아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데 앞장섰다.

좌파지식인들은 자신의 자유에 속하는 언론 사상 학문의 자유를 누리면서 타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논리를 개발했다. 남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고 나의 자유만 중요하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좌파들이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경제적 자유를 위태롭게 했다.

그 위태롭게 한 요인은 시기적으로 다르다. 1950년대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 이전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그리고 복지국가의 확장으로 인하여 경제적 자유가 위태롭게 되었다. 이 시기는 서방국가에서는 케인스주의와 신고전파의 시장실패이론이 정신세계와 그리고 정치세계를 지배했다. 동유럽에서는 계획경제이론이 지배하고 있었다.

개인의 자유의 억압을 초래한 정부의 개입 형태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정부가 기업인으로 행세하여 기업을 규제하고 기업의 경영을 간섭한다.
- 누진세 및 세수를 증대시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의 사용을 정부가 박탈해간다.
- 복지확대를 위해서 증세는 물론 정부부채의 증가와 통화의 증발을 불렀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에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여 개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달라졌다. 그 요인이 “무제한적 민주주의”이다. 현대의 민주국가에서 민

4)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롤즈는 정치적 자유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자유가 아니다.

주주의는 단순한 투표메커니즘이 아니라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정부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도록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로가 되었다.

압력 단체로서 이익단체들의 그룹이기주의가 국가를 경유하여 경제적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하는 것을 자유주의자들이 목격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강력한 영향력의 증대이다. 그리고 각종 이권추구를 위한 정치적 행위가 난무하던 시기였다.

자유주의자들이 행동의 자유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경제적 자유를 강조했던 것은 그 같이 경제부분에서 개인의 자유가 그 어떤 부문보다도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가 다른 어떤 자유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만을 중시한다는 좌파의 해석은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좌파 지식인들이 정신적-시민적 자유만을 중시하고 경제적 자유를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다고 자유주의자들이 언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유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이런 자유를 희생시켜 경제적 자유만을 부각시킨다면, 이것은 '경제적 자유주의'이지 '자유주의'가 아니다.

경제적 자유가 다른 자유와 똑같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식어 없이 자유주의이다. 두 영역의 자유를 똑같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자유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

좌파지식인들이 경제적 자유를 무시하고 시민적 자유만을 중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활동은 정신적 활동이기 때문에 아주 고귀하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활동은 물질적 차원, 또는 행동의 차원이기 때문에 정신적 차원보다 낮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 이념적 전통은 영국의 노동당과 미국의 좌파(이는 미국적 자유주의이다), 그리고 철학자로는 롤즈를 비롯한 사회민주주의 철학의 핵심이었다. 우리는 이런 분리가 가져온 것은 간섭주의와 국가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하여 경제적 자유는 물론이요 시민적 자유까지도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의 통일성을 믿고 있었던 인물이 1980년대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M. Thatcher)였다(민경국, 2012). 시민적 자유가 더 고귀하다고 믿으면 경제적 자유를 상실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경제적 자유나 시민적 자유는 똑같이 중요하고 오히려 경제적 자유가 제한되면 시민적 자유의 제한이 뒤따른다고 믿었다. 그는 자유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고 여겼다.

사고와 행동의 통일체

정신적 자유는 중요하고 경제적 자유는 경시해도 된다는 좌파들의 입장은 우리의 이성의 발달과 우리의 지식의 축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각만이 중요하고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시각이다.

사고의 과정(정신적 과정)은 견해, 아이디어, 의견을 토론하고 교환하고 변형하고 이런 저런 말투로 바꿔 표현하는 과정이다.⁵⁾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의견의 자유가 모두 그런 사고의 과정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견해나 아이디어를 현실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은 실제와 부딪치는 행동이다. 따라서 그 같은 행동과정은 아이디어, 견해나 의견의 옳고 그름, 적절 또는 부적절을 판별하는 과정이다.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경험적으로 유예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견해가 어떤 것인지, 실제로 오류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생각과 행동, 이 두 가지 과정은 분리될 수 없다. 그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견해 또는 새로운 의견은 생각과 행동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⁶⁾

행동과 사고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우리의 이성이 개발된다(Hoppmann, 1988: 382). 생각이 없는 행동과 행동이 없는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천이 없는 생각,

5) 이런 정신적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가장 인상적으로 말을 하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미학적이고 웅변적인지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논리적으로 부합하는가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6)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생각이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처럼 논리적 사고, 연역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논리적이고 연역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성의 적용을 의미한다. 사고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심사숙고, 우려한다(Bedenken)/생각을 바꾸다(Umdenken)/ 기억 회상 (Gedenken)/ 기억 추억 회상 (Andenken)/ 의심하다.(Verdemken).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 (Hoppmann, 1988: 383, 주석 16)

실천 없는 아이디어 또는 의견은 공리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생각과 행동은 이와 같이 분리될 수 없는 통일된 하나라는 것이다. 이런 통일성은 행동의 자유와 그리고 정신적 영역의 자유(언론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종교와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와 관련이 있는 생각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생각과 행동은 서로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 자유와 행동의 자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는 똑같이 중요하다. 생각과 행동의 상호작용에서 우리의 이성이 개발된다면 정신적 자유와 행동의 자유는 모두 우리의 이성의 개발을 위해 두 가지 자유는 동일한 가치가 있다.

행동이 없이는 사고도 의미 없고, 사고가 없이는 행동도 의미 없기 때문에 행동의 자유가 없이는 생각의 자유는 의미가 없다. 경제적 자유는 정신적 자유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기초이다.

좌파는 이런 상호작용 대신에 정신적 과정을 너무 지나치게 중시했다. 행동이 없는 생각은 공허할 뿐이다. 탐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토론과 언론의 자유는 새로운 진실이 발견되는 마지막 단계에서야 비로소 중요하다.

그 전 단계에서는 행동의 자유가 중요하다. 새로운 견해,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은 기존의 아이디어와 견해를 현실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만하고 토론만하고 의견만을 교환하고 이런 저런 말투로 바꾸어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생각의 자유를 중시하고 행동의 자유를 무시하는 사상은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존재의 원인을 사고에서 찾는 데카르트 사상의 연장이다. 이 사상은 인류의 발전을 인간의 의식적 사고로부터 생겨난다고 보기 때문에 정신적 자유를 중시하고 행동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경시한다.

경제적 자유와 같은 행동의 자유를 무시하거나 이들은 희생시키는 대신에 정신적 자유만을 칭송하는 것은 건축물의 꼭대기 부분을 건축물의 전부로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이에크의 말은 사고과정과 행동과정의 등가성을 적절히 표현한 말이다. (Hayek, 1971: 43쪽)⁷⁾

7) 그리고 그는 『자유와 헌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Hayek, 1971: 44 쪽): “지적인 과정은 이미 형성된 아이디어들을 정교하게 만들고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선별하고 나쁘다고 여기는 것들은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행동과 물질적 현상이 서로 만나는 영역에서 흘러나온다. 자유를 지적인 영역에만 적용할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가치, 목표, 능력, 재주를 실제로 적용하고 집행하는 영역이고 그 결과로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장경제의 가격이나 또는 관행이나 관습들 그리고 각종 상품과 서비스와 같은 상품세계를 형성하는 것이 행동자유 영역이다. 행동자유에서 생겨나는 대표적인 것이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이다.

행동의 자유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새로운 상품에 관한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견해의 생성을 위한 기반일 뿐만이 아니다. 복잡한 문명을 실제로 정하는 것도 사고의 자유가 아니라 행동의 자유이다. 그리고 이런 행동의 자유로부터 형성되는 행동과정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들을 표현하고, 견해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과정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다.

경제적 자유는 시민적 자유의 보루

좌파지식인들은 경제적 자유 또는 행동의 자유는 억압해도 되고 시민적 자유 즉, 정신적 자유는 건드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 이런 믿음은 행동의 자유를 억압해도 정신적 자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의 억압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자유는 다른 자유의 보루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의 억압은 다른 자유의 억압을 초래한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하이에크는 경제 자유를 상실하게 되면 다른 자유도 잃어버린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저서가 『노예의 길』이다. 경제적 자유의 제한은 의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자유의 제한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환거래에 대한 국가통제는 산업자유와 통제와 전체주의로 이끌어간다. 외환통제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의 해외탈출의 수단을 봉쇄하는 수단이다. 외국의 잡지나 신문 또는 서적 구입을 봉쇄하는 수단이다.

반정부 인사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봉쇄하는 수단이다. 이로써 외환통제는 언론의 자유, 의견의 자유를 억압하여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출판과 인쇄의 국가독점도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또는 신앙의 자유를 제약하는

없어져 버린다.”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⁸⁾

사유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사회는 과도한 국가권력을 막기 위한 보루로서 작용한다. 만약 국가가 인쇄와 언론 매체의 독점적 소유자라고 한다면 언론·출판의 자유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자유로운 매체의 반향이 없이는 의견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가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대폭 감소한다. 수송수단이 국가에 의해 독점된다면 거주 이전의 자유 또는 주거 선택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 필요한 공간을 국가가 할당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집회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⁹⁾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정신적 자유만을 중시하고 경제적 자유를 무시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오류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강령이 매우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스럽다는 것을 말해준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계획경제와 동일하다. 부의 생산을 정부가 통제할 것을 요구하는 강령이다. 그러나 이런 강령에 따라 부의 생산을 통제할 경우 그 결과는 인간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간섭주의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친정부적 태도여하에 따라 간섭의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기업조사,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언론 매체나 또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런 지원을 막기 위해 세무사찰을 감행하여 기업인들의 정치적 선호의 표현을 억압한다.

그런 사례도 경제적 자유가 언론의 자유와 그리고 종교 활동의 자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조세를 통한 경제적 자유의 제한도 궁극적으로 정치적 여론의 통제를 야기한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데 이런 경제적 자유의 억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가 적으면 적을수록 국가가 다른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

계획경제가 경제적 자유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의 억제는 결국 전체주의를 초래한다.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를 억제하는 국

8) 이에 관해서는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최정표 역, 형설출판사 1999) 제1장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를 참조하라.

9) 하이에크의 논문을 편집 번역한 책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민경국 편역 문예출판사 1989 143쪽 참조

가는 개인의 자유권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 ‘부(富)의 생산을 통제하는 것은 인간생활 그 자체를 통제하는 길’이다.(Hayek, 1982: 119)

따라서 경제적 자유는 돈 버는 자유라는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전지전능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항력으로서 작용한다. 그것은 국가권력을 억제하는 기능을 행사하고 이로써 정치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유주의가 논의의 중심을 두는 것은 권력의 문제이다. 특히 국가권력이 문제이다. 왜냐 하면 국가권력은 총과 칼과 형무소를 가진 권력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소망스럽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에 간섭하는 국가는 개인의 자유권을 위태롭게 한다.

국가의 경제개입은 항상 강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의 전권(專權)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개발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함께 경제적 자유이다.

사유재산권은 인류의 가장 소중한 발견물이다. 이것은 화폐의 발견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다.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국가의 전권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해한다.

경제적 자유가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적경제로 조직된 경쟁시장과 시장사회는 국가의 과도한 권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항력이다. 그것은 민주적 선거제도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물질 추구를 위한 자유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 경제 자유는 다른 자유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로 인하여 정신적 자유도 높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유역사가 주는 교훈

벤담을 비롯한 19세기 철학자들은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대중선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준다고 주장했다(Friedman, 1982/1990: 24)

그러나 서유럽의 경우를 보면 그 인과 관계는 바뀌었다.¹⁰⁾ 봉건시대의 폭정을 극

10) 이 아래 부분은 어떤 문헌의 내용을 요약하여 인용했다. 그러나 그 문헌이 어떤 문헌인지를 잃어버렸다. 그 문헌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도 했지만 내용이 훌륭하여 인용된 원전을 밝히지 못했지만 그대로 살려두기로 마음먹었다. 그 문헌을 찾는 대로 다른 글에서 기회가 있으면 밝힐 것이다.

복한 것은 경제적 자유였다. 봉건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대단히 불평등했다. 경제활동도 불평등했다. 계급에 따라 적용하는 법도 달랐다. 귀족은 약자에 대하여 특권을 향유했다. 상인들은 이런 사회구조에서 적절히 행동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극복한 것이 경제적 자유였다.

경제적 자유의 확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상관습법(Merchant Law)”이다. 그리고 이런 법의 집행도 국가에 의존하지 않았다. 상인단체인 길드가 집행과제를 맡았다. 이런 법 규칙들은 유럽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오늘날 유럽이나 또는 그 밖의 지역의 민법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상관습법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다.

첫째로 그것은 상인에게는 물론 생산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경제적 자유를 허용했다. 이런 관습법을 채용한 도시는 수많은 기업인들이 폭정을 일삼는 봉건지역을 등지고 물려들 만큼 매력적이었다.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하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관습법이 확산되었다.

두 번째로 이런 법 규칙이 특정의 계층이나 특정 지역의 출신을 우대하거나 또는 차별하지 않고 보편적이었다는 점이다. 외국인이든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봉건시대의 차별적인 법적용이 극복되었던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정의가 자생적으로 실현되었다.

이런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재산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번영이 뒤따랐다. 기술혁신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그 원인이었다. 요컨대 유럽의 산업혁명이 이런 것이다. 이런 혁신과 함께 생겨난 경제적인 번영은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등장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특히 유럽지역의 무역의 개방과 그리고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상인과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은 정치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자의적인 입법과 자의적인 행정적 관행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유럽의 지배자들은 자본과 생산요소를 끌어들여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세수입도 확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자유지향적인 개혁과정에서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같은 시민적 자유도 확립되었다. 이런 시민적 자유를 위한 물적 기반이 경제적 자유를 통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의 등장과 함께 등장한 것이 중산층이었다. 경제적 번영으로 인하여 교육받은 중산층이 두껍게 형성되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자유로운 기업가들, 노동자들, 자본가들은 재산가들이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두꺼운 중산계층을 형성했다. 그들은 과거에는 대부분 봉건적 지배자의 가신이었거나 농노였던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무산자들이었다. 봉건사회에서 차별받던 계층이었다. 이들은 과거의 정치질서에 도전했다. 그 대신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유럽 사람들은 보다 많은 자유와 헌법적 보장을 요구했다. 민주주의시대, 열린 자유시장경제의 시대 그리고 자본주의의 시대가 이렇게 해서 서구사회에 꽃을 피우게 되었다.

유럽사회의 간략한 역사적 개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에 뒤이어 그리고 경제적 번영에 힘입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런 진화과정은 비단 서구사회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동양사회에서도 목격될 수 있다. 한국이 대표적이다. 한국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유시장경제로부터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다. 이런 번영에 뒤이어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가 확보되었다.

따라서 좌파가 그리워하던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경제를 통한 경제발전 덕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진화 과정을 중국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민주화, 즉 정치적 자유의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될 잠재력이 있다¹¹⁾. 그러나 경제적 자유와 번영에 뒤이어 나타날 정치적 자유로의 진화과정이 정부의 강압에 의해 봉쇄당하고 있다.

사적 소유권이란 술보다 더 위험하다는 엘리트주의적인 믿음이 지배하던 과거의 인도를 보라! 경제적 자유가 봉쇄된 채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의 위반은 민주주의를 부패시켰고 민주정치의 발전도 정체시켰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사회에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는 것도 경제적 자유의 확립에 기인한 것이다. 경제적 자유와 시장경제의 바탕이 없었다면 민주주의는 완벽

11)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이다. 부카르트와 레위스-백(Burkhart/Lewis-Beck: 1994)가 열거한 정치적 권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의미 있는 선거과정을 통해 주요 정치적 자리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의미 있는 선거를 통하여 입법부의 구성, 공정한 선거법, 선거 캠페인 기회 등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자유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에 관해서는 민경국(1996)을 참조

한 부패로 얼룩졌을 것이다. 시장경제를 가진 민주주의, 이런 민주주의만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그리고 시민적 자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인도를 보자. 오랫동안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입법을 수행하는 이른바 제대로 된 의회민주주의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인도는 시장경제체제가 결코 아니다.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했다. 기간산업은 국유였다. 그리고 가격규제를 비롯하여 은행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매우 심하다. 시장경제라고 부르기에는 부적합한 경제체제였다. 심지어 네루 수상은 사유재산은 술 취한 사람처럼 위태롭다고까지 말했다.

독일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스웨덴 그리고 유럽사회전체가 비록 정치적 자유는 대단히 성숙되어 있지만 그러나 경제적 자유는 제한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및 시장경제와 부합될 수 없다.

시민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

흥미로운 문제는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과 같은 정신적 자유가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 영향이다. 종교자유와 경제적 번영의 관계에 관하여 앨런과 체이스(Alon/Chase, 2005)가 공동으로 연구한 통계적 연구이다. 그 상관관계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번영의 관계보다 높다.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물론 경제적 자유와 경제번영이다. 그리고 종교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의 상관관계도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의 상관관계보다도 높다. 정치적 자유란 정치에 참여할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관계는 종교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의 그것보다는 낮다.

이런 연구결과가 시사해주는 것은 한국에서 종교자유가 경제적 자유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고 그리고 시장경제가 종교적 관용의 실현에 미친 중요한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자유가 경제번영에도 기여했을 것이다.

또 다른 통계적 연구도 매우 흥미롭다. 헵크와 월터스의 연구가 그것이다 (Hanke/Walters, 1997). 이 연구보고에 의하면 정신적 · 정치적 자유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경제성장과 경제적 자유의 상관계수는 시민적 · 정치적 자유와 경제성장간의 상관계수보다 3배나 더 크다. 프리덤 하우스의 연구결과 는 6배나 된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정신적 자유보다 경제적 번영에 훨씬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관용은 사유재산제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관용과 시장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 사유재산제에서는 시장에서 가격을 통하여 소득과 재산이 자생적으로 분배되고 그리고 가격을 통하여 자원들이 다양한 용도로 배분된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정부가 분배와 그리고 자원배분을 담당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정부가 인종이나 종교적 감정에 연계하여 그런 과제를 수행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회주의권에서 종교의 자유와 관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역사적인 우연이 아니었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박해가 없는 자유, 종교적 표현의 자유, 종교 출판의 자유, 그리고 종교조직과 종교 결사의 자유를 말한다. 종교적 표현의 수단도 다양한 것이 시장경제이다. 시장경제를 가진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더 잘 융성할 수 있다. 출판과 그 배포도 사유재산제를 전제로 하는 사회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교회도, 출판도 그리고 집회도 자유롭지 못하다.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

시민적 자유(정신적 자유)는 분명히 경제성장을 야기한다. 그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확립해 주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어떤가? 민주정부가 경제성장을 야기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다(Barro, 1997; Przeworski/Limongi, 1993) 그러나 이런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라고 해도 경제발전이 지체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독재정부가 경제발전에 우호적이라고도 말한다. 따라서 보익스(C. Boix)와 스톱스(S. Stokes)는 민주주의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Boix/Stokes, 2003: 538~539).

그러나 이런 결론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다. 무제한적 민주주의는 의회에서 정한 법은 무엇이든 법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양립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 민주정부는 자유주의와 부합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와 부합

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경제적 번영을 야기할 수 없다.(Hayek, 1979; North, 1992). 제한적 민주주의에 가까운 것이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민주주의도 발전되었고 자유시장경제도 발전되었다. 뉴질랜드도 최근에 미국의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된 유럽 국가들을 보자.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의 민주주의는 복지국가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대신에 자유를 침해하고 이를 억압하는 제도를 생산한다.¹²⁾ 그 증거는 그들의 경제적 자유도가 대단히 낮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나라보다 성장률이 대단히 낮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경제적 번영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문제도 정치학에서 매우 중시하는 문제이다. 경제적 번영이 큰 나라들 가운데 민주정체를 가진 나라가 가난한 나라들보다 많은 것이 사실에서 경제가 발전할수록 독재정치가 민주정체로의 전환되거나 또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민주정체를 가진 나라는 독재로 전환될 가능성이 적다는 이론이 생겨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이 독재보다는 민주정치에 왜 우호적인가의 문제이다. 그 첫 번째 대답은 가장 흔한 것인데 그것은 철학자 존 롤즈가 대변하고 있다 (Rawls, 1971). 인간은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면, 비물질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선호 이론을 적용하여 경제발전은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이를 유지한다는 이론을 정당화하고 있다. 물질적 욕구가 충족하면 민주와 참여라는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독재보다 민주정치에 우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다. 보익스(C. Boix)와 스톡스(S. Stokes)가 대표적이다. 그들은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에 우호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이유다. 이를 인센티브로 설명하고 있다. 즉, 현재 독재체제이든, 민주체제이든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배자가 독재를 획득하기 위해 투쟁할 경우에 드는 비용이 독재를 통해서 얻는 이득보다 크기 때문에 지배자는 민주주의를 택하거나 이를 유지하려고 한다.(Boix/Stokes, 2003: 520)¹³⁾ 경

12) 독일은 자유도의 세계랭킹이 2000년 15위 2001년 19위, 2002 17위, 2003 18위, 2004 17위이었다. 스웨덴은 각 해당년도 세계랭킹을 보면 19위, 23, 21, 18, 24위이다. 싱가포르는 2000년에는 세계3위이었다. 그러나 그 후 줄 곳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하여 홍콩은 2000년에 1위 그리고 그 후에도 줄 곳 1위를 차지했다.

13) 현재 독재체제이든 민주체제이든, 빈곤한 나라의 경우에는 독재체제를 통해 지배자가 얻는 이득이 민주화를 택하거나 기존 민주체제를 유지하여 얻는 이득보다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자는 독재를 선호하거나 또는 민주주의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제가 성장할수록 그 격차는 커진다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는 파르와 로드의 등의 통계적 분석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Farr/Lord, 1998: 260). 78개국을 연구한 결과 그 내용은 경제발전이 정치적 자유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민주정부든, 독재정부든 과도 정부든 상관없이 모든 정부는 개인의 자유에 비추어 본다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공공정책프로그램에서 생겨나는 부담을 회피하려 한다. 다른 한편 그들은 공공정책으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편익을 얻으려고 한다. 따라서 강제와 명령 그리고 통제 등,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모든 정치적 행위의 불가피한 부분이다.

이에 반하여 자유 시장경제는 상이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상이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협력한다. 그들이 제각기 맺는 인간관계는 강제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다. 자발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런 관계가 상호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로부터의 지시나 또는 강제가 없이도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매일 매일 경험한다.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적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재산권을 교환할 자유, 여행할 자유, 그리고 이주할 자유를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경우에만이 정부의 강압적인 권력이 제한되고 분산될 수 있다.

시장경제가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조종된다면 기업가적인 자유로운 행동, 책임 있는 행동이 소멸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정부에 예속되고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한다. 시민들의 창조성과 독립성, 자립심이 상실된다. 이것이 유럽 사회의 무역도시의 몰락과 함께 생겨난 문제였다. 그리고 이것은 13세기 이후 폐쇄된 중국, 중앙집권적인 중국의 형성으로부터 생겨난 결과였다. 이제는 유럽사회가 복지국가의 비극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어쨌든 주목할 것은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자유라고 격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신적 시민적 자유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로서 그리고 이런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보루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는 경제성장을 통하여 정치적 자유와 민주정치 발전의 야기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통한 민주정부의 생성과 그리고 그 공고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토론문>

“자유론: 시장에 적합한 자유의 개념”에 대한 논평

정연교 교수 (경희대학교 철학과)

* 논문의 구성

1. 문제의 제기 (시장경제에 적합한 자유개념은?)
2. 자생적 질서와 시장경제 (시장질서의 특징)
3. 자유주의와 자유 (올바른 자유 개념에 대한 설명)
4. 반시장적 자유의 의미 (잘못된 자유 개념의 사례)
5.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 핵심논지

1장

자유는 다양한 개념을 포함한다.

자유개념은 특정한 사회관과 인간관을 전제한다. (1)

시장질서에 적합한 자유개념을 찾아야 한다. (1-2)

2장

시장질서는 자생적 질서이다. (2-3)

시장질서는 “지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좋은 질서이다.

시장질서는 “기업가 정신”을 전제하는 인간관을 지지한다. (4)

시장질서는 “정의로운 행동규칙”에 기초한 법의 지배를 요구한다. (5-6)

3장

자유는 강제(coercion)의 부재라는 소극적 개념에 기초한다. (7)

소극적 자유는 개인주의와 “오류가능성”에 의해 정당화 가능하다. (9)

자유는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법/정의와 양립 가능하다. (10)

어떤 것이 강제에 속하는 지 그렇지 않은 지는 끊임없이 고민할 문제이다.(11)

4장

문제는 국가권력에 의한 자유의 박탈이다. (12)

국가가 국민에게 도덕적 목표를 강요하는 것은 강제이다. (12)

행복이나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와 자유로운 국가는 다르다. (13)

도덕적 자아를 실현하는 국가와 자유로운 국가는 다르다. (14-15)

밀의 주장과 달리 모든 관습으로부터의 해방이 자유는 아니다. (16)
코스의 “외부효과 상호성” 이론은 법 감정과 정의감에 어긋난다. (18)
롤즈 등이 주장하는 “자유들”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제약이다. (19)

5장

민주주의는 권력의 원천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19)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20)

* 논의꺼리

1. (소극적) 자유가 없는 상태에 대한 정의 문제 (7-8)

- 감금상태
- 소비자의 선택과 행동이 의도적으로 가로막힌 상태
- 신체적, 경제적 위협에 노출된 상태
- 공포에 질린 상태
- 사기나 기만을 당한 상태
-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하거나, 신경질적인 가족
- 하도급 상태
- “갑을관계”

참고) 하이에크의 “오아시스”, “공황기의 해고”, “외딴 광산촌에서의 갑을관계”
J. J Thomson의 “헨리 폰다” 사례 - 소극적 책임의 경계
홉스, “침몰 위험에 처한 배의 선장”

2. 소극적 자유의 정당화 근거 문제

(1) “소극적 자유의 정치적 공준은 두 가지에서 출발한다. 첫째로 누구나 자신의 이해 관계를 가장 잘 안다. 둘째로 국가는 개인의 목적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8)

(2) “관용의 윤리로 간주될 수 있는 개개인들 각자의 가치 잣대에 대한 존중은 인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오류가능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9)

(3) “가치 없는 행동에 자신의 자유를 허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자유를 이용하는 사람만큼 자유롭다. 자유는 나쁜 일을 행하고 또 실수를 저지를 자유까지도 포함한다. 이런 광범위한 자유가 허용되는 이유는 인간은 잘못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사회발전은 이런 학습에 좌우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12)

인용문에 기초한 논증 재구성

(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Pr1 “이해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목적”을 결정할 수 있다.

Pr2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C1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자신의 “목적”을 결정할 수 없다.

C2 국가는 개인의 “목적”을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된 논증 (1)의 전제 1과 2 모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잘 안다고 해도 의지박약하여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즉 스스로 목적을 “결정”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소위 “인성교육”의 필요성도 이와 유사한 논거에 기초해있다. 이에 대한 반박 근거는?

(2)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Pr1 누구나 “가치문제”에 있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Pr2 오류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

C1 “가치문제”에 있어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C1 국가도 국민 개개인의 “가치문제”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경우, 전제1과 전제2는 상충할 수 있다.

만약 누구나 자신의 “가치문제”에 있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도 자신의 가치문제에 있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누구나 특정인 n에 대해 동일한 정도의 오류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중 본인의 의견을 특별히 기본 값으로 삼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넛지’로 유명한 “자유지상주의적 온정주의”는 이와 반대되는 근거, 즉 본인의 견해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기본 값으로 정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 근거한다.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3)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Pr1 사회발전은 학습에 의해 좌우된다.

Pr2 인간은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한다.

Pr3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자유가 있어야 한다.

C1 사회발전은 소극적 자유를 전제한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전제 2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배울 수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행착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자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채택하거나,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시행착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상쇄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밀이 <자유론>에서 사용한 논증은 후자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밀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혹시 밀이 주장한 것과 다른 정당화 근거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3. 정치사상가 대한 해석과 관한 논의거리

(1) 홉스에 대한 해석

“현대의 정신과는 다르게, 위협은 홉스에게는 자유의 침해가 아니다. 몽테스키외가 자유의 억압으로 여겼던 공포에 의한 행동도 그에게는 자유로운 행동이다.” (7)

“자유와 질서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 전체주의 사상에서 자유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서를 잡아야 한다. 무계획적인 생산을 계획된 생산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 이와 같은 사상에서 나온 대표적인 예가 토마스 홉스의 국가론, 맘스주의 및 중앙집권적 경제질서다.” (9-10)

코멘트

홉스의 정치철학을 전체주의로 보아야 하는 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체주의는 독재에 더해 국가가 국민의 삶 전반을 통제하는 체제를 지칭하는 개념인 반면 홉스는 그 같은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17세기 유럽 전역에서 발발했던 혼란을 종식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치적 권력의 절대성을 주장했을 뿐이다. 물론 절대주의가 전체주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논거가 필요한 듯하다.

참고) 전체주의(totalitarianism),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절대주의(absolutism)

Totalitarianism, form of government that theoretically permits no individual freedom and that seeks to subordinate all aspects of individual life to the authority of the state. Italian dictator Benito Mussolini coined the term *totalitario* in the early 1920s to characterize the new fascist state of

Italy, which he further described as “all within the state, none outside the state, none against the state.”

Authoritarianism, principle of blind submission to authority, as opposed to individual freedom of thought and action. In government, authoritarianism denotes any political system that concentrates power in the hands of a leader or a **small elite that is not constitutionally responsible to the body of the people.**

Absolutism, the political doctrine and practice of unlimited centralized authority and absolute sovereignty, as vested especially in a monarch or dictator. **The essence of an absolutist system is that the ruling power is not subject to regularized challenge or check by any other agency, be it judicial, legislative, religious, economic, or electoral. (Britannica)**

홉스 해석에 참고할 전거 (리바이어던, 30장)

(평등한 과세)

"과세의 평등은 동일 재산에 대한 동일 과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부채에 대한 동일 과세**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부채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방위에 대해 코먼웰스에 지고 있는 부채를 말한다." (443)

"주권자가 인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다양한 사업과 직업에 종사하는 사적 개인들을 지켜주기 위해 공공의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급여인** 것이다. ... 따라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들에 대해서는 **빈자의 부채나 부자의 부채나 전적으로 같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과세의 평등은 소비의 동등성에 기초한 과세, 즉 동일한 소비에 대해 동일한 과세를 하는 것이지, 재산의 동등성에 기초한 과세, 즉 소비하는 자의 재산이 동일하다고 해서 동일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노동을 하고, 노동의 과실을 더 많이 저축하고 절약한 사람이, 나태하고, 소득이 적고, 버는 대로 다 쓰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 (444-5)

(공공 구제)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사적 개인들의 자선행위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코먼웰스의 **법으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445)

(좋은 법)

"내가 말하는 좋은 법은 정의로운 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롭지 않은 법은 없다. 법은 주권자가 만드는 것이며, 주권자가 한 모든 행위는 인민 각자가 승인한 일이며, 또한 각자가 그 행위의 본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코먼웰스의 **법은 도박의 규칙과 같은 것이다.** 모든 도박꾼이 합의한 규칙은 그들 어느 누구에게도 불의한 것이 될 수 없다. 좋은 법이란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동시에 '명료한' 법을 말한다." (446)

(불필요한 법)

"법은 공인된 규칙이기 때문에 그 효용은 인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활동을 구속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충동적인 욕구나 성급함, 경솔함으로 인해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데 있다. 이것은 마치 **울타리가 보행자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을 따라 걷도록 하기 위해 세워져**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법은 법의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좋은 법이 아니다." (446)

(명료한 법)

"명료성은 법의 조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의 취지와 동기를 명확히 밝히는 데 있다. ... 입법자의 의도가 명확히 나타나 있으면, 단어 수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 그러므로 입법자의 직무 중 하나는, 왜 그런 법을 제정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법의 본문은 가능한 한 짧게, 그러나 정확하고 의미 있는 용어로 표현하는 일이다." (447)

4.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해석

"밀에게 자유는 제한이 없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태도의 의도적 개발이다. 이 때문에 그에게 자유는 적극적 개념이다." (16)

"어쨌든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원칙은 첫째로 국가와 법은 개인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여기를 것을 증진하기 위해서 개인의 삶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념의 온정주의를 배제한다. 둘째로 어떤 행동들은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는 관련이 없이 내재적으로 부도덕하고 그래서 그런 행동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도덕주의도 배제한다." (17)

코멘트

자유에 대한 밀의 입장을 둘러싼 해석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한 가지 가능성은 그를 헤겔과 같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밀을 하이에크나 포퍼와 유사한 "비판적 합리주의자"로 해석하는 것이다.

인용된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밀의 입장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한편 적극적 자유를 옹호하지만 다른 한편 분명하게 온정주의와 도덕주의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그를 헤겔에 가까운 입장으로 해석하도록 하지만, 후자는 그를 하이에크나 포퍼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 사람으로 해석하도록 이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민 교수는 전자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나는 밀을 비판적 합리주의 계열의 학자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같은 해석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가 적극적 자유 개념을 옹호하는 것이 비판적 합리주의와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자유에 대한 논의의 층위를 도덕적 이상으로서의 자유와 정치 질서로서의 자유를 구분하는 것이다.

밀은 분명 윤리적 완벽주의자이다. 그는 완벽하게 계몽적인 사람을 이상적이라 여겼

다. 그가 흠모한 사람은 예수, 소크라테스,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들이다. 그는 모든 사람의 삶이 대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밀을 헤겔과 유사한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밀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몽적으로 이상적인 삶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밀은 베를린의 주장과 달리, 사람들이 적극적 자유 개념을 이상으로 삼아도 국가가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 듯하다. 물론 그가 제창한 “해악의 원리”를 채택한다고 전제한 주장이다.

적극적인 자유개념과 전체주의의 실질적 연관성에 대해 밀과 베를린 중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밀이 단지 적극적 자유개념을 취했기 때문에 그를 비판적 합리주의자가 아니라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가까운 사상가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특히 밀이 전체주의는 물론이고 계획경제와 같은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을 비판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 글의 서두에서 민 교수님은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하나는 (Q1) 시장질서에 적합한 자유 개념을 찾는 것이다. 이는 시장질서가 바람직하다고 가정할 때,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마땅한 이상적 상태에 대한 모색이다. 다른 과제로 민 교수님이 제시한 것은 (Q2)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금지할 행동 또는 제거할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6)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향해야 마땅한 상태가 분명할 때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문제이다.

전자는 이상이나 목적의 문제이며, 후자는 방법이나 수단의 문제이다. 이 둘에 대한 답은 전자는 소극적, 적극적 개념으로, 후자는 불간섭과 간섭 개념의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한 답은 네 가지가 된다. 하지만 베를린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불간섭을 하나로 묶고, 적극적-간섭을 다른 하나로 묶어야 한다면, 자유주의자는 자칫 가치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입장 하나만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내몰릴 수 있다.

가치관에 있어 소극적 입장이란, 적극적 입장이 계몽적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어떤 가치관이든 대등하다”고 생각해야만 하는 입장, 즉 가치상대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소극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보상은 적극적 가치관을 주창하는 사회주의자들을 교조적 계몽주의를 고집하는 절대주의자라고 비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물론 대안이 있다. 자유주의가 반드시 가치상대주의를 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치 다원주의로도 충분하다. 만약 다양한 가치관을 허용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다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객관성을 담보하면서도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치의 상대성이 아니라 핵심 가치와 그것을 담아내는 다양한 방식의 구분이다.

자유주의의 핵심가치는 개인주의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합리적 개인주의, 즉 “스스로 기획한 인생에 대한 합리적 추구에 남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자유, 평등, 관용 등을 주요 정치적 가치로 채택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할 경우, 자유주의는 가치상대주의, 즉 “어떤 가치관이든 대등하다”는 입장과 조화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이슈는 과연 밀이 합리적 개인주의자인가 아닌 가이다. 이미 보았듯이 밀은 이상으로서의 자유를 적극적 개념, 즉 자아실현과 연계하여 파악했다. 그의 가치관은 벤담과 같은 쾌락적 공리주의자의 가치관과 다르다. 행복이 세속적 쾌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비록 쾌락일지라도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좋은 인생이란 “도덕적이고(moral)”, “현명하고(prudent)”, 심지어 “고상(noble)”하기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밀이 하이에크나 포퍼와 같은 비판적 합리주의자와 얼마나 유사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판적 합리주의는 “오류가능성 논제”가 대표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면, 여기에서 이슈는 과연 오류가능성 논제가 가치상대주의를 지지한다고 보는 것이 옳은 가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마치 그 어떤 것도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즉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믿음, 주장, 가치가 대등한 정도의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류(error)는 부조리(absurdity)가 아니다. 따라서 오류가능성은 “Anything goes.”도 아니다.

민 교수님의 입장이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밀에 대해 길게 논구한 것은, 한편 학구적인 이유에서다. 즉 자유주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밀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평소 가졌던 생각을 피력해본 것이다. 그러나 쓰다 보니 다른 이유가 더 큰 것 같다. 종종 자유주의를 이상도 꿈도 없는 물질만능주의나 쾌락주의처럼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우리가 자초한 바 없지 않다. 우리 편이라 생각해 온 베를린의 이분법을 따르다 보니, 어느새 그렇게 된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득보다 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논평은 그래서 사실 자기 반성적이다.